

광주·전남 폐지 줍는 노인 1222명...생계 근근이 이어간다

보건복지부 229개 지자체 전수조사

광주·전남지역에서 '폐지 수집'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노인이 12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지역 폐지수집 노인의 월평균 소득은 전국 평균을 웃돌았으나 전남은 미달하는 등 도농간 편차도 있었다.

보건복지부는 9일 광주·전남지역을 포함한 '폐지수집 노인 지자체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광주·전남을 포함한 전국 22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역 내 고물상 및 폐지수집 노인'에 대한 전수조사다.

전국 고물상 7335곳 중 폐지수집 노인들이 납품하는 고물상은 3221곳으로, 총 1만4831명의 노인이 폐지를 줍는 것으로 조사됐다. 고물상 1곳당 폐지줍는 노인 평균 활동 인원은 4.6명인 셈이다.

광주에서는 616명, 전남에서는 606명이 폐지를 줍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의 폐지수집 노인이 2530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기 2511명, 경남 1540명, 부산 1280명 순이었다. 광주와 전남은 전국 17개 시도에서 9위, 10위에 해당했다.

인원 수로 광주 9위·전남 10위

월 소득 광주 87만원·전남 73만원

전국 1만4594명...평균 78.1세

25%가 재산 2500만원 미만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4219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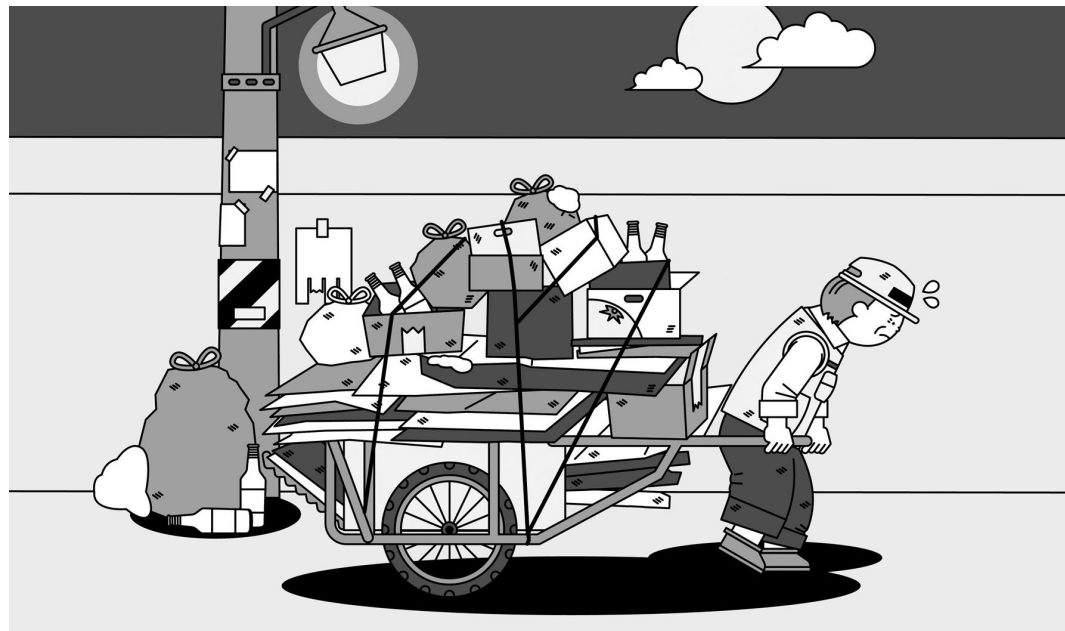
열악한 환경 속 지속적 관리 필요

65세 이상 폐지수집 노인 1만4594명 중 기초연금수급자는 1만3086명이었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4219명이었다.

광주지역 폐지줍는 노인의 월 평균 소득은 87만 2000원으로 전국 폐지수집 노인의 평균 소득(기초연금 수령 포함)은 월 76만6000원보다 높았다.

하지만 전남지역 폐지줍는 노인의 월 평균소득은 73만5400원으로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했다.

전국 폐지줍는 노인들의 월 평균소득을 구간별로 보면 50만~60만원 구간 비율이 23.9%로 가장 높



았다. 이어 70만~80만원이 13.9%, 60만~70만원 13.3%였다.

재산 규모를 살펴보면 '2500만원 미만' 인 이들이 25.2%로 가장 많았고 '5000만~1억원 미만'

19.9%, '1억~1억5000만원 미만' 13.7% 순이었다. 재산 평균을 내보면 1억2000만원이었다.

폐지 줍는 노인들의 평균 연령은 78.1세였다. 65세 이상부터 5세 단위로 연령대를 조사한 결과 80

~84세의 비중이 28.2%로 가장 컸다. 75~79세가 25.2%, 70~74세가 17.6%였다.

폐지수집 노인의 연령은 경기도가 79.5세로 가장 높고, 제주도가 75.4세로 가장 낮았다.

전체 성별을 보면 여성이 55.3%로 남성보다 많았다. 복지부는 폐지수집 노인 1만4831명 중 4787명이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공익활동형 참여 노인이 3430명, 시장형사업단 등 민간형 일자리 참여자가 1228명, 사회서비스형 참여자가 129명이었다.

특히 시장형 사업단 참여자의 대부분인 1141명(95.1%)은 '자원재활용 사업단'에 소속돼 폐지수집과 유사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자원재활용 사업단에 참여하면 월 20만원의 보조금과 개인 폐지수집 수입을 급여로 받을 수 있고, 안전용품과 상해보험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들은 평균 월 37만3000원의 급여를 받았다.

복지부는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폐지수집 노인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지자체 특성에 맞는 정책을 마련하도록 지원하는 한편, 노인일자리 사업에 더 많은 폐지수집 노인이 참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시, 폐지 수집 어르신에 '폭염 안전물품 꾸러미'

607명에게 휴대용 선풍기 등
경량 손수레 160여대도 지원

광주시는 "만 65세 또는 장애인 등 지원이 필요한 폐지 수집 어르신 607명을 대상으로 '폭염 안전물품 꾸러미'를 지급한다"고 9일 밝혔다.

제사용 가능한 가방에 담긴 '폭염 안전물품 꾸러미'는 휴대용 선풍기, 형광 망사 안전조끼, 양우산, 쿨스카프, 쿨패치, 벌레약, 식염포도당, 자전거 후미등 등 9가지 물품과 폭염 행동요령

소책자 등으로 구성돼 있다.

안전물품 꾸러미는 각 구정을 통해 전달되며, 폐지 수집 어르신의 안부를 함께 확인하고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 교육 등도 병행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폭염 안전물품 꾸러미' 외에도 폭염 등 열악한 환경에 노출된 폐지 수집 어르신의 생계와 안전을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재활용품 수거인 지원 조례'를 개정해 폐지 줍는 어르신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폭염기간 '자원재활용동단'을 한시적으로 운영해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폐지 수집 어르신에게 재활용품 사전 선별 등 안전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경비 2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KB국민은행의 기부금 1억원을 활용해 폐지수집 어르신에게 경량손수레 160여대도 지원할 예정이다.

정미경 광주시 자원순환과장은 "기후위기에 취약한 폐지 수집 어르신의 안전을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며 "무더운 여름 폭염 안전물품 꾸러미로 조금이나마 시원하고 건강하게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강제동원' 니혼코크스공업 상대 손해 일부 승소

광주지법 "유족별 1300만~1억원 배상하라" 판결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유족이 전범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최근 광주법원이 정부가 인정한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의 손해배상 청구를 전범기업과 동일한 회사라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한 것과는 다른 결론이 나온 것이다.

광주지법 민사11부(부장판사 유상호)는 9일 강제동원 피해자 7명의 유족(11명)이 니혼코크스공업주식회사(전 미쓰이광산)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유족별 상속 비율에 따라 1300만~1억원의 배상금을 유족들에게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피해자들은 1940년~1942년 일본 홋카이도의 미쓰이 광산 주식회사의 탄광에서 강제노역을 했다. 이에 유족들은 미쓰이광산과 실질적으로 동일 회사인 현 니혼코크스공업주식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곡성 출신인 A씨는 1941년 2월부터 홋카이도 미쓰이 광산 비바이 탄광에서 노역하다 크게 다쳐 후유장애 때문에 49세였던 1949년에 숨졌다.

B씨는 1942년 8월 11일 영광 장터에서 일본 손

사들에게 강제 연행돼 일본 홋카이도 미쓰이 광산에서 3년여간 강제노역했다.

이들은 석탄분진에 기도가 막혀 목에서 피가 나오는데도 수년 동안 묵사했고 귀귀 후에도 심각한 후유증을 겪었다.

원고 측 법률대리인인 정인기 변호사는 "일본 외무성이 송달을 거부하면서 재판이 많이 지연돼 5년 2개월 만에 승소 판결이 내려졌다"며 "피고 측은 강제동원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항변했지만 법원이 오랜 시간이 지나 피해 사실을 인정했"이라고 분석했다.

이날 법정을 찾은 한 유족은 "할아버지와 외삼촌이 모두 홋카이도로 강제 동원됐다가 할아버지만 살아서 돌아오셨다"며 "일본 전범기업과 일본의 사죄가 없는 상황에서 재판이라도 이겨서 전범기업의 잘못을 인정받는 것 같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간첩 혐의 고초' 거문도 팔촌 형제 50년만에 재심서 무죄...한 풀었다

광주고법 "고문에 거짓 자백 강요"

"50년 동안 듣고 싶었던 '무죄'라는 말을 막상 들으니 너무나 허탈하고 허망합니다."

50년 전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간첩으로 내몰린 70대 A씨는 재판부의 선고를 듣고 난 후 깊은 탄식을 내뿜었다.

9일 오후 광주고법 21호 법정에서 형사2부(재판장 이의영)가 50년 전 간첩으로 몰려 징역형을 선고 받은 2명에게 무죄를 선고하자 방청석에서 '탄세' 외침이 이어졌다.

이날 법정에는 8촌 관계인 A(78),B(70)씨가 법정에 섰다. 이들은 1976년 김재민씨 일가 거문도 간첩 사건 3년여 전에 발생한 또 다른 거문도 간첩 사건으로 50년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17살이었던 B씨는1972년 북에서 온 삼촌과 함께 북에 다녀와 8촌인 A씨를 포섭했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를 받고 경찰에 붙잡혔다.

재판에 넘겨진 B씨는 1심에서 사형을 구형받았지만 최종심에서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5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이 확정돼 복역했다. 이들은 2022년 김재민씨 유족 등이 '거문도 간첩단' 사건(1976년)의 재심 결정을 받는 것을 보고 지난해 재심을 신청했다.

B씨는 "당시 삼촌이 권유해 배를 타지만 도착한 곳은 일본이었을 뿐"이라면서 "북의 지령을 받거나 포섭을 당했다는 것은 당시 경찰과 검찰에서 허위로 조작한 사실이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수사 과정에서 장기간 불법 구금과 전기 고문·몽둥이질·가혹행위로 거짓 자백을 강요 받았

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검찰은 불법구금은 인정했지만, 당시 북에 다녀온 간첩행위는 유죄가 맞다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맞섰다.

재판부는 불법구금, 고문 등 가혹행위 불법수집된 증거 등을 모두 인정하며 A씨와 B씨의 손을 들었다.

재판부는 "이들은 구속영장을 발부받지 않은 상태에서 구속됐고, 불법적으로 장기간 구금된 점이 인정된다"면서 "불법 구금된 동안 이들에 대한 가혹행위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들의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이야기 할 수 없는 상당히 구체적인 부분들이 있고 일관된다"면서 "당시 작성된 자술서에도 가혹행위에 대한 내용이 들어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어 재판부는 당시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나중에 발부됐지만, 이미 불법적 구금으로 인한 심리상태가 지속된 상태로 조사가 작성돼 감·경 조사보고서에 대한 신빙성이 없다고 봤다.

당시 압수된 증거물도 임의제출 형식이었으나 영장없이 강제로 수집된 증거라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결국 증거들의 증거능력은 모두 상실됐다.

재판이 끝난 뒤 A씨와 B씨는 "당시 우리가 겪은 고통은 말로 다할 수 없다"고 탄식했다.

휠체어 없이 이동이 힘든 A씨는 "가혹행위 후유증으로 장애까지 생겼다"면서 "주변분들 격려 덕분에 무죄를 받았다"며 고마워했다.

검찰은 재판부의 판결 내용을 검토해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조선의 시인
아홉번째
시집

담양에서 길어 올린 아름다운 시편들의 향연 담양, 인향만리 죽향만리

“ 이 시집은 담양을 사랑하는 조선의 시인이
몸소 시가 된 담양의 현사가 아닐까. ”

이성혁(문학평론가)

시인의 말

과거가 / 미래를 향해 / 현재에 살아 있는 곳
담양은 / 말로만 듣는 것보다 / 직접 와서 보면 안다
왜 다시 오고 싶은지

조선의

농민신문 신춘문예, 기독교 신춘문예, 미선21 신춘문예 당선
송순문학상, 신석경문학상, 신성문학 대상 등 수상
시집 『빛을 소환하다』, 『꽃, 향기의 밀서』,
『꽃으로 오는 소리』, 『아직 도달하지 않은 임의 문장』 등 발간
(시꽃피다) 광주 시장작 강사
서울 성동구 평생교육원 시장작 강사
(시꽃피다) 전북지역 시장작 강사
담양문화원 시쓰기 강사

지은이 | 조선의
펴낸 곳 | 도서출판 상상인 ☎ 02-747-1367